

시론

강진원 군수가 쏘아 올린 '반값 여행' 성공 신화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전 대한지리학회장

대통령이 강진군을 록 찍어 칭찬했다. "제가 언제든, 선거 때 한번 갔었던 텐데, 그 동네에 와서 쓴 돈의 몇 퍼센트를 지역화폐로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은 준 것이 아니죠. 그 동네에서 안 쓰면 날아가는 거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강진이었죠." 지난 9월 2일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은 '국비를 잘 쓰는' 방안 토론과정에서 나왔다. 문체부 장관이 지방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 와서 돈을 써주면 도움이 된다"며 지역관광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대통령이 강진을 성공 사례로 들었다. 강진 '반값 여행'이 전국적 뉴스로 등장한 순간이었다.

사실 '반값 여행'은 시작부터 주목을 받았다. 먼저 파격적이었다. 지금까지 유사 상품은 많았지만 최대 20만원 환급은 처음이었다. 관광객 유치에 어렵지 않은 곳에서 파는 신상(新商)도 이색적이었다. 강진은 '남도답사 1번지'란 별칭을 가진 곳 아닌가. 가난한 강촌의 실험적 시도였다. 강진은 전국 인구감소지역(89곳) 중 재정력이 꼴찌권이다. 시작부터 전국 지자체 눈길을 사로

잡았다. '반값 여행' 첫해인 작년엔 애를 많이 먹었다. 2월말 열리는 청자축제와 연계해 신청자를 모집했지만 쉽지 않았다. 관광 비수기엔 신청이 낮았다. 낮은 인지도 때문이었다. 그러나 8월부터 입소문이 나면서 참가객이 크게 늘었다. 12월까지 사업비(22억원)를 소진했다. 당초 계획한 소기 성과도 거뒀다.

올해는 완전 대박이었다. 작년보다 증액한 예산(32억원)이 5월에 동이 났다. 추경(24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7월에 재개했지만 8월에 완판됐다. 무엇보다 강진 모델을 본뜬 동일 상품이 전남은 물론이고 전국으로 확산됐다. 영암군 원플러스원, 하동군 신촌부터 여행 등이 대표적 사례다.

'반값 여행' 성공 신화는 강진원 군수 리더십에서 비롯됐다. 강 군수는 일찍부터 생활인구에 쏘았다. 활력을 잃고 있는 농산어촌에 생기를 불어 넣는 대안으로 봤다. 일본 인구감소지역 모델에 착안한 듯하다. 2010년 군수에 취임해 추진한 체류형 농촌관광상품 '강진 푸소'는 생활인구 유지전략이었다. 생활인구 개념이 보편화되기 훨씬 전이다. '반값 여행'은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강진 푸소' 새 버전인 셈이다.

'반값 여행' 정책화는 쉽지 않았다. 초기에 군민 반응은 썩 좋지 않았다. '예산 낭비' '관광객 퍼주기'란 비판적 여론이 있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할 군수로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장들에게 사업을 소상히 설명했다. 군민과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가 모여 토론도 했다. 군민들도 사업을 공

감했다. 강 군수가 쏘아 올린 '반값 여행'은 날개를 달았다. 행안부는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 기금 운용 방향을 변경했다. 지금의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꿨다. 인구유입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라는 시그널이다. 체류인구 확대 모델로 '반값 여행'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반값 여행' 시범지역을 전국 20곳에서 실시한다.

'반값 여행' 성공에도 아쉬운 대목은 많다. 외지인 비율이 높지 않다. 광주 전남 사람들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여행경비 총액에서 숙박비가 30%를 넘지 않는다. 강진 내 체류시간이 짧다는 말이다. 여행경비 정산금(최대 20만원) 사용처도 대형마트와 일부 식당으로 한정됐다.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다.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럼에도 '반값 여행'을 성공했다고 평가한 이유는 지역경제 재순환 구조 때문이다. 환급한 여행경비 지원금은 100% 지역 내에서 재소비된다. 군비를 퍼준 것이 아니다. 군비로 지역성권을 살리는 사업이다. 이전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시도해 볼 사업이 아니라, 팔기 시도해야 할 사업이 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시군 정책을 록 찍어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다. 강진군처럼 혁신적 모델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강 군수는 '반값 여행'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희망의 불씨를 퍼트리고 있다. 강 군수가 내년과 내후년에 어떤 묘책으로 지역에 또다시 활력을 불어 넣을지 주목해 보자.

社說

2026 기후변화협약 주간 국내 후보지 여수 선정 의미

여수시가 '202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UNFCCC Climate Week)' 대한민국 유치를 위해 실시한 공모에서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주관으로 2021년부터 시작된 기후주간은 전 세계 188개국 협약국과 국제기구·NGO 등 수천명이 참여한다. 당사국총회(COP) 공식의제 설정을 위한 고위급 회의 등 사전 협의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2023년 상반기에 열릴 기후주간의 유치를 결정하고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여수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경기 고양, 제주와 2차 발표 심사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이들을 따돌렸다. 전남도는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 노력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기후 리더십을 세계에 천명하고,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전환점으로 삼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그 당위성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으며,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동권 12개 시군과 손잡고 공감대를 확장해 왔다.

당사국총회는 매년 기후변화 이행 방법을 논의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이다. COP33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치러질 예정으로, 아태지

역 그룹에서 결정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주간이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전남도의 열망과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것이다. 남해안권 상생을 강화하고 있는 전남도와 연대하며, 도민과 시민사회 단체의 의지와 열의가 더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앞으로 전남도와 여수시는 정부와 협력해 유치 확정 후 실용성과 품격을 갖춘 회의장, 다채롭고 특색있는 연계 행사와 전시 프로그램, 편리하고 안전한 숙박·교통 등 차질없는 준비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가장 권위있는 기구인 당사국총회가 여수에서 열려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규모 국제행사 역량을 입증하는 이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기후주간 유치가 첫 관문이다. 남해안 남동권이 기후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국제도시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다. 공고한 협업 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COP33 유치까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정기여자 불발 흥복학원 정상화 장기 표류 안될 일

학교법인 흥복학원(광주 대광여고·서진여고)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 재공모까지 불발된 이유가 학교내 일부 부지가 설립자 소유로 확인된 때문으로 전해졌다. 법인 정상화추진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마감한 결과, 신청자가 없었다.

대부분 법인 소유의 교육용 자산인데, 토지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급식소 등 소유권 문제가 드러났다고 한다. 부채 외에 또 다른 사유지가 돌출되면서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화추진위와 광주교육청은 추석 연휴 뒤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지만 장기 표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설립자 측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새로운 이사진이 꾸려질지,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사학비리로 10년째 임시이사 체제로 파행을 겪는 사태를 벗어날 계기로 시민사회의 관심이 한 지대였다. 그동안 재반 규정을 민주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해도 권한 행사에 한계가 분명했다. 민간 개발업체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왕복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을 컨테이너로 차단, 등·하굣길 통행

에 불편을 초래한 상황에서 적극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단적인 사례다.

흥복학원은 설립자의 교비 횡령,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처분, 회계 운영 부적정 등이 적발돼 임시이사로 운영 중이다. 여기에 통학로 일부 폐쇄 등 재정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재정기여자 공모마저 끝내 무산되면서 결국에 학생들의 피해가 가중될 게 뻔하다. 남구 서문대로에 위치한 대광여고등학교는 24학급 528명, 서진여자고등학교는 17학급 244명 규모다. 광주교육청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설립자 측을 설득하는 등 더욱 주도적으로 역할해야 한다.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 의미있는 시작으로 여겼다. 그만큼 허탈감이 크다. 학교 구성원들의 심정은 더더욱어진다. 학원 정상화는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본다. 안정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해선 안 된다. 강력한 의지로 나서야 한다. 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곱씹어야 할 것이다.

기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김수진

노무사(드든 노무사사무소 대표)

광주·전남 지역은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다수의 산업이 이주노동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인원이 2만718명으로, 지난해 1만400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인력만큼 그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 속 안전 문제와 인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증가하는 산재, 멈추지 않는 위험 2025년 현재 올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피해자는 9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농업 분야 산재 피해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90% 증가해 다른 업종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10일, 전남 고흥군 두원면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는 태국과 베트남 출신 노동자 두 명이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중 모터가 작동하지 않자 담수 정화 시설 안으로 들어갔지만, 감전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는 지급되지 않았다. 숨진 노동자 중 한 명은 단기 계절근로(E-8) 비자 소지자였고, 다른 한 명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이었으며, 두 사람 모

두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전날에도 곡성군의 한 과수원 농로에서 30대 베트남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그는 지게차 운전 자격증 없이,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업무에 투입된 상태였다. 이처럼 언어 장벽과 불안정한 신분 탓에 안전 수칙을 익히지 못 한 채 위험 작업에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이주노동자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호소하는 문제는 임금체불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광주에서 약 4천400명, 전남에서 약 6천500명이 임금 체불 피해를 입었으며, 체불 총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은 언어 장벽과 법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퇴직 시 체불임금을 주지 않는 관행까지 여전하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심각하다. 고용 불안과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 관리지나 동료의 폭언, 과도한 업무 배정, 휴식·휴가 제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피해를 당해도 이를 신고하거나 구제받기 어렵다.

실제로 올해 2월 전남 영암의 한 축산농장에서 일하던 20대 네팔 노동자가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같은 달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는 30대 스리랑카 노동자가 동료 근로자들에게 벽돌 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가혹행위를 당해 공분을 샀다. 결국 이주 노동자는 "저임금·고위험 노동 + 차별과 괴롭힘"이라는 이중의 악자 지위에 내몰리고 있다.

정책 과제와 제언 첫째, 이주노동자 전담 감독 조직이 필요하다. 지방노동청이나 지자체가 협력해 외국인 고용 현황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실제로 강원도와 김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담팀을 운영하며 다문화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둘째, 통합 복지·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건강·의료·심리 상담·법률 지원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마련해, 체류 기간이 짧고 한국어에 서툰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사업주의 책임 강화와 처벌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불법 파견, 무면허 작업 지시, 임금체불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이주노동자 보호 장치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의 소중한 동반자이다. 그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인간 존엄의 문제이자,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광주·전남의 경제가 그들의 땀 위에 세워져 있다면, 이제는 그들의 권리 또한 우리의 책임 속에 세워져야 한다.

독자투고

즐거운 추석 연휴, 안전수칙 지키자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왔다. 매년 이맘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가 이어진다. 특히 긴 연휴가 이어지는 올해 추석에는 많은 이들이 귀향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국내외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명절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들뜬 기분에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면서 전기화재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전기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대표적으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안 쓰는 콘센트 안전커버 부착 ▲전선 피복 확인 ▲물 묻은 손으로 전자제품 사용 금지 ▲누전 차단기 점검 등이다.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교통안전도 빼놓을 수 없다. 추석에는 장거리 운전과 귀성 차량 증가로 교통사고가 급증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음주운전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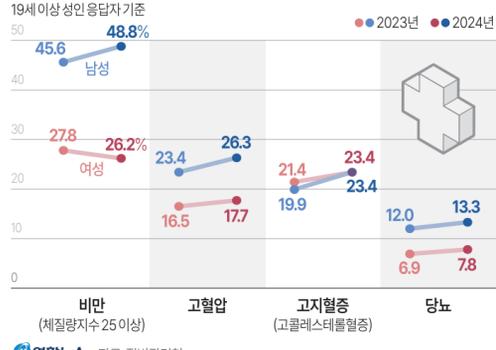
타이어·엔진오일 등 차량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모임 후 음주운전이 급증하는 만큼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안전은 명절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다가오는 추석, 전기와 교통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

(신강호·장흥경찰서 경무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성인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현황



3대 성인병으로 꼽히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비율이 지난해 남녀 모두에서 1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30일 발표한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질병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지난해 남성 26.3%, 여성 17.7%로 1년 전보다 각각 2.0%포인트, 1.2%포인트 올랐다.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 13.3%, 여성 7.8%

포인트 올랐고, 고지혈증 유병률은 남녀 모두 23.4%로 각각 3.5%포인트, 2.0%포인트 높아졌다. 남성의 경우 비만 유병률도 48.8%로 3.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40대(50.2%~61.7%)에서 전년 대비 비만 유병률 증가(11.5%포인트)가 두드러졌다. 40대 남성의 다른 성인병 유병률은 고혈압 27.8%(+4.3%포인트), 당뇨병 13.7%(+2.4%포인트), 고지혈증 27.5%(+5.0%포인트) 등이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